

광주·전남 정서 위기학생 위한 '안전망' 부실하다

지난해 5267명 중 전문기관 연계율 80%대 '전국 하위권' 자살위험군 1567명... '낙인 찍힐까' 부모 반대에 관리 안돼

광주·전남 지역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기록해 학생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서 위기를 겪는 광주·전남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제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학습권·교육활동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다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종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관심군 학생 2715명 중 전문기

관에 연계된 학생은 87.8%(2385명)에 그쳤다. 전남에서는 관심군 학생 2552명 중 86.3%(2202명)가 전담기구에서 상담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경기(67.2%)가 가장 저조했으며 서울(75.1%), 경남(82.4%) 다음으로 전남과 광주가 낮았다.

광주 지역의 경우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검사 대상 5만5533명 중 4.88%이고, 자살위험군은 795명으로 1.43%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검사대상 학생 5만8971명 중 4.32%가 관심군이고 자살위험군은 1.30%(772명)로 확인됐다.

광주·전남 학생 100명 중 4명은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중 1~2명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학생은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신과적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기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대다수 완치될 수 있지만, 개입 시기를 놓쳐 성인이 되면 정신질환이 만성화돼 뇌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전남의 정서위기 학생들의 12.9%가 전문기관에 연계조차 되지 않고 있어 치료를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연계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정부·지자체 연계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있고, 기타 민간기관이 있다.

특히 적극적인 치료와 입원을 고려해야할 광주와 전남의 자살위험군 학생의 각 6.6%(47명), 9.9%(73명)가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중 10대 이하(만 19세 이하) 사망자 수는 2019년 7명,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4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 역시 10대 이하 사망자 중 2019년 10명, 2020년 9명, 2021년 13명, 2022년 12명이 고의적 자해로 숨졌다.

전문가들은 연계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의 반대'를 꼽고 있다. '관심군 전문기관 미연계 사유'에 따르면 학부모나 학생이 거부한 경우가 광주 83.6%, 전남 76.5%로 가장 많았다. 기타 사유, 출결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부모들이 정신과 상담·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무 담당자도 "학부모가 반대할 경우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이 "우리 애는 아직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학교나

또래 친구들이 문제다'는 식으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힐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김도연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은 "정신과 문제는 빠르게 개입할수록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하면 80%가 완치되지만, 3년이 넘고 만성인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완치율이 20%까지 떨어진다"며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교육청은 병원이나 상담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꺼려지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조선간호대와 국립나주대병원을, 전남은 조대·남부대·목포대를 거점센터로 지정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전남 전세사기 693건의 '피눈물'

국토부 지난달 1065건 추가 인정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1065건을 추가로 인정해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건수는 693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3차례에 걸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까지 포함하면 광주에서 203건, 전남에서는 490건이 전세사기 범행

으로 인정 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등에 접수된 총 2만6543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 중 2만4968건을 국토부로 이관받아 2만2949건을 처리해 1만 81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지역별로 인정된 건은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차이는 있지만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6번째로 전세사기 범행이 가장 많은 발생했고, 광주는 11번째였다.

전국 전세사기가 범행이 발생한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4%로 나타났다.

전세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20-29세가 25.38%, 30-39세가 48.43%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폐교 위기'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

교사단체, 이사 전원교체 등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재단 비리와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명진고등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명진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안)을 행정예고 했다. 시교육청은 행정 예고문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여고 선호도 하락 등으로 인한 신입생 감소에 따른 학사 운영과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명진고를 여자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공고했다.

명진고는 1986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광이고(여고)로 개교한 뒤 세종고, 명진고로 교명을 변경했다.

시교육청은 남녀 공학 전환으로 최종 결정되면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명진고 남녀 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학생 배치 여건, 학교시설, 학교법인의 노력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친 뒤 남녀 공학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명진고는 학교법인 전 관계자의 비위, 공익 제보 교사 상대 소송 등의 문제로 2021학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신입생 미달사태가 이어졌다.

이 학교 미달의 직간접 영향으로 광산구의 경우 중학교는 26개인데 비해 고등학교는 11개교에 그쳐 1152명이 복구와 서구 소재 고등학교로 배정되기도 했다.

교사노조는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에 앞서 재단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더 이상 학교가 정상화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학교법인 이사진들의 임원 승인 취소의 요건은 충분하다"면서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전 이사장 일가로부터 벗어나고 지역 사회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월 한빛원전 주민 공청회 4~5일 영광·고창서

부안 지진과 농번기 등을 이유로 미뤄졌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 공청회가 7월 열린다.

20일 한빛원전 등에 따르면 영광과 고창은 각각 7월 4일과 5일 오후 2시 주민 공청회를 연다.

영광은 영광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전체 11개 읍·면 주민이 참여한다. 고창은 고창 문화의전당 공연장에서 성내면을 제외한 고창읍 등 13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합의를 제외한 5곳(무안·영광·장성·부안·고창)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부안 지진 여파와 농번기와 겹친다는 민원에 따라 연기했다.

한수원은 영광, 고창군과 날짜 협의 끝에 날짜를 확정했고 무안, 장성, 부안군과 협의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빛원전 1·2호기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합평 주민들은 7월 5일 오전 10시 40분께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침수 대비 지하철도 점검

올 여름 첫 장마를 앞둔 20일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동림동 우석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침수 피해 발생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막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어치는 기성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